

鄧小平사후 중국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1997. 2.

申 相 振
(統一環境室 研究委員)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室

- 目 次 -

I. 문제제기	1
II. 중국 내부정세 전망	2
1. 江澤民체제 유지	2
2. 공산당 통제력 유지	4
3. 개혁·개방정책 지속	5
III.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7
1. 대외정책 기초	7
2. 대미정책	8
3. 대일정책	9
IV.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11
1. 한반도정책 기초	11
2. 대북정책	12
3. 대한정책	13
V. 우리의 고려사항	14

I. 문제제기

- 1978년 제11기 3중전회(중국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설계·지휘하고 중국에서 안정과 발전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던 鄧小平이 1997년 2월 19일 92세를 일기로 사망했음.
-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江澤民이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확정된 후에도 鄧小平은 막후에서 대북한정책 등 중국의 핵심 대내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 바, 鄧小平의 사망은 중국의 내부정세와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본 보고서는 鄧小平 사후 江澤民체제의 안정성, 공산당의 통제력,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여부 등 중국 내부정세를 분석·전망하고, 중국의 對미·일 및 대한반도정책을 예측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중국 내부정세 전망

1. 江澤民체제 유지

○江澤民체제는 1970년대말 毛澤東 사후의 華國鋒체제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바, 鄧小平의 사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華國鋒은 毛澤東사망 5개월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기반을 구축할 여유가 없었으나, 江澤民은 1989년 鄧小平의 후계자로 발탁된 후 지난 8년동안 당·정·군내에 자신의 세력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 왔음.

- 毛澤東사후에는 華國鋒에 비해 정치경륜이 월등히 앞선 鄧小平, 李先念, 陳雲, 葉劍英 등 원로들이 정치일선에서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원로들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¹⁾

- 毛澤東사후 중국에서는 華國鋒 등 문혁파와 鄧小平 등 반문혁파간에 정책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어 반문혁파가 군부를 비롯한 중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됨으로써 華國鋒이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으나, 현재 중국의 지도부간에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심각한 노선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는 적어도 15차 당대회시까지 지속될 것임.

1) 楊尙昆, 萬里, 彭眞, 薄一波 등이 생존해 있으나, 1992년 14차 당대회시 「중앙 고문위원회」 폐지이후 이들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음.

○또한 중국 지도부내에는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 권력투쟁이 전개될 경우 공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바, 이도 江澤民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금년 가을 15차 당대회와 1998년 봄 9기 전인대를 통해 鄧小平 사후 중국 지도부간 권력재편의 윤곽이 확정될 것이며,²⁾ 江澤民은 보다 확고하게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임.

○그러나 1989년 6월 중국공산당 제13기 4중전회시 趙紫陽 후임으로 당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江澤民이 안정적으로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鄧小平이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는 바, 鄧小平 사망을 계기로 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도전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6.4 천안문사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고,³⁾ 국유기업과 농촌경제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江澤民체제는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음.

2) 현재 중국 공산당내 권력서열 2위인 李鵬이 헌법규정에 따라 내년 3월 9기 전인대에서 국무원 총리직을 사임해야 하며 권력서열 3위인 喬石도 고령으로 인해 전인대 상무위원장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는 바, 15차 당대회시 당 주석제(1982년 폐지)를 신설하여 江澤民이 주석직에 오르고 李鵬과 喬石에게 부주석을 제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음.

3) 중국에서 6.4 천안문사건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경우, 1989년 6.4사건의 책임을 지고 숙청된 趙紫陽이 복권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현지도부 대다수가 천안문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중국 국민들이 혼란을 바라지 않고 있는 바, 조만간 중국에서 천안문사건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2. 공산당 통제력 유지

○江澤民과 李鵬 그리고 喬石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신봉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산당에 의한 지배는 鄧小平 사망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에서 공산당에 정면 도전할 집단화된 사회세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1993년이래 「연착륙정책」의 성공으로 중국 국민들이 현정치체제에 큰 불만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세력이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음.⁴⁾

○중국의 정치과도기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군부가 공산당 중앙의 명령과 통제체제하에 놓여 있다는 점도 공산당에 의한 지배가 지속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다만, 鄧小平은 혁명1세대 지도자로서 「4항 기본원칙」⁵⁾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정신적 지주였는 바, 鄧小平의 사망은 지방에 대한 당중앙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개혁·개방정책 가속화 이후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국민들

4) 1993년 7월부터 朱鎔基에 의해서 주도된 중국의 경제 연착륙정책은 물가안정과 경제발전 지속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경제 연착륙정책으로 1994년 21.7%에 달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6년에는 6.5% 내외로 진정되었고 경제성장률도 10%를 기록하였음. 評論員, “了不起的軟著陸,” 「人民日報」, 1996. 12. 6.

5) 「4항 기본원칙」은 공산당 일당지배원칙, 사회주의노선 견지, 무산계급독재 원칙, 맑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 견지 등을 뜻함.

- 의 황금만능주의 현상으로 공산당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와 신뢰도가 약화되어 왔음.
- 특히 당간부들의 부패는 빈부격차와 인플레이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과 맞물려 공산당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3. 개혁·개방정책 지속

- 江澤民 등 중국의 지도자들은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만이 鄧小平 사후 중국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지속될 것임.
 -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중국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고, 현지도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 江澤民체제하의 개혁·개방노선도 기본적으로 鄧小平이 추구해 온 「정치적 통제하의 경제발전」이라는 구도를 답습할 전망이다.
 - 鄧小平 사후 江澤민지도부는 안정유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용인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江澤民체제가 당분간 내부안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江澤民은 급진 성장정책 보다는 안정기조의 경제발전 정책을 통해 급진 개혁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 농촌경제 피폐, 실업사태 및 정신문명 황폐화문제에 대처하려 할 것임.

III.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

1. 대외정책 기조

- 鄧小平 사망이전인 1992년부터 江澤民과 李鵬이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 결정권한을 행사해 왔고 1995년이후 鄧小平이 대내외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⁶⁾ 鄧小平 사망이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江澤民은 내부안정과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둘 것인 바,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미·일 등 서방 선진국에 대해 협력지향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江澤民 지도부가 대내 단결 수단의 하나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南沙群島와 釣魚島 영유권문제와 대만문제 등 국가주권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강경한 정책기조를 채택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6) 1992년 「南巡講話」이후 鄧小平은 자신이 직접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鄧小平辦公室」 주임인 王瑞林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만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1995년부터서는 王瑞林이 「鄧小平辦公室」 주임 자격으로서가 아닌 중앙군사위원 자격으로 정치국확대회의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대미정책

- 江澤民 지도부는 내치에 치중함으로써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야 하는 바, 미국의 패권정책에 정면 대응하기 보다는 미국과의 타협 정책에 대미정책의 비중을 둘 것임.
- 중국은 대만에서 노골적인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한 대만에 대한 유화책을 통해 대만해협 양안간 긴장완화를 모색하게 될 것임.⁷⁾
 -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변화에 최대 현안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유화정책은 중·미간 갈등소지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바, 江澤民 지도부는 관세율 인하와 불공정무역관행 철폐요구 등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미국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나 병력을 보유한 중국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아·태지역 안정유지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무리한 봉쇄정책 보다는 「협력적 개입정책」

7) 중국은 鄧小平의 사망이 기정사실화된 금년초부터 1995년 1월 江澤民이 대만정책 방침으로 발표한 「江八點」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음. 「江八點」은 「一國兩制」 원칙을 통한 평화적인 대만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을 선호할 것임.

- 이와 관련, 3월 錢其琛 외교부장의 방미와 고어부통령의 방중 및 11월 江澤民 주석의 방미 등 중·미 최고지도부간 접촉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임.

○다만, 중국이 대내 안정과 단결유지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경우 중국내 인권문제와 관련 중·미간 마찰이 표출될 가능성은 있음.

- 이와 관련,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방문시(2.24-25) 중국에 대한 인권압력을 완화할 것이나, 중국이 王丹 등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한 3월 제네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인권 결의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3. 대일정책

○중국은 자신의 최대 교역국(1996년 601억달러)인 일본과의 안정적인 경제관계 유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바, 일본과의 정치·경제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중국은 일본과 국교정상화 25주년을 맞이하여 李鵬총리 방일과 하시모토 일본총리의 방중 등 지도자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1995년 핵실험 재개이후 악화된 대일관계를 복원하려 하고 있음.

○일본도 중국내 정세안정,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역할 확대 및 대중

시장확보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협력정책을 모색할 것임.

- 이와 관련, 일본은 1995년이래 중단된 대중 무상원조 재개와 제 4차(1996~2000년) 엔차관 조기제공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지할 것임.

○따라서 鄧小平 사후 중·일간에는 중국의 핵실험 재개, 대만해협 양안간 군사긴장 고조,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과거사문제 및 釣魚島 영유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긴장국면이 일시적이거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IV.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1. 한반도정책 기초

- 중국은 주변정세가 대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라고 있는 바, 1,35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임.
-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자신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여 북한이 미, 일 등 강대국들의 영향권내에 편입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나, 鄧小平 생존시에 비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여력은 감소될 것으로 보임.
 - 鄧사후 중국지도부는 대내 정치·경제문제 해결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것이므로 남북한 당사자에 의한 한반도문제 해결원칙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임.
- 鄧小平 사후 중국의 신지도부는 혁명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서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중국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지도부는 황장엽의 중국내 장기체류는 미국의 개입 야기와 남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 중국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을 무마시키면서 사건을 가능한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

2. 대북정책

- 과거 중국과 북한간에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 원로지도자간 인적 유대관계에서 기인한 측면이 많은바, 1994년 김일성 사망과 이번 鄧小平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
 - 1994년 김일성 사망시 鄧小平은 「鄧小平판공실」 주임인 王瑞林을 북한에 비밀 파견하여 대북 지원정책 지속을 약속한 바 있음.
 - 그러나 한·중수교이후 한·중 최고 지도자간 십여차례에 걸친 공식 회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과 김정일간에는 한번도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음.

-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일차적으로 긴장 상황이 완화되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중·북한간 군사동맹조약중 자동군사개입조항에 크게 구속받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을 자제하려 할 것임.

-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될 경우 중국의 내부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경제·외교적 지원은 지속할 것임.
 - 중국의 지도부는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지 1년여만에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

되면 중국의 체제도 적지 않은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왔음.

- 또한 중국은 북한의 대미, 대대만 접근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원조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임.

3. 대한정책

-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과거와 달리 최고지도자 1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지도부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점차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될 것임.

- 鄧小平 사후에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지속할 것인 바, 한국에 대한 경제교류·협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1996년 한·중간 교역규모가 200억달러에 달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5대 교역상대(홍콩과 유럽연합 제외시 3대 교역국)로 부상하였음.

-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정책을 견제하고 대만의 국제공간 확대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정치·안보관계 확대 필요성을 갖게 될 것임.

V. 우리의 고려사항

- 중국은 人治國家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차적으로 중국의 신지도부와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함.
 - 특히 鄧小平 사후 중국에서 군부의 정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바, 중국군 지도부와와의 교류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정책을 지속해 왔는 바, 한국은 북한의 모험행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함.

- 중국은 황장엽사건 등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일의 개입 확대를 원하지 않고 있는 바, 한국은 미·일을 통한 대중 압력정책 보다는 중국과의 직접 협상을 우선시해야 함.
 - 중국은 황장엽사건이 남북한 등 관련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

- 鄧小平 사후 중국이 대내 안정유지 차원에서 소수민족자치구 동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인 바, 한국은 중국 동북삼성지역내 조선족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함.

- 3월 8기 전인대 5차회의와 7월 홍콩주권 반환 및 10월 15차 당대회 등을 겪으면서 중국내 정치상황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

는 바, 한국은 중국내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함으로써 중국사태가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토론자: 최의철 선임연구위원
오승렬 연구위원
최춘흠 연구위원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研究報告書〉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 96-27 한·일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 96-29 한·중 안보협력 방안 연구

〈統一情勢分析〉

- 96-01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97-01 대만核廢棄物 북한搬入의 問題點
97-02 鄧所平사후 중국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96-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0. 1 ~ 1996.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論叢〉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統一研究論叢 第5卷 2號(1996.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1996)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上)

96-02 統一과 北韓社會文化(下)

鄧小平사후 중국의 내정과 한반도정책 전망

統一情勢分析 97-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2월 일

發行日 1997년 2월 일
